

대주그룹, 협력사와 상생 결의

결제·입찰방식 개선 등 동반자로 공생관계 강화 태스크포스팀 운영...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도

대주그룹이 외부 협력업체들과의 공생관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전 계열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주그룹은 21일 허재호 회장 주재로 경영개선을 위한 그룹 임원단 회의를 갖고 지금까지 협력업체와의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향후 외부업체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결의했다. 이를 위해 계열사인 대주건설 주재로 전문건설협회 및 대주건설 협력

업체 사장단 간담회를 이번 주 중으로 열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대주건설 내에 협력업체 관계개선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개선안에는 결제 및 입찰방식 개선, 협력업체 애로사항의 체계적 반영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세부적으로는 대금결제방식 및 지급기한 조정, 투명하고 공정한 방향으로 입찰방식 개선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주그룹은 대주건설의 대협력업체 관계개선이 확대되는 대로 건설 부문 1천500여 협력업체를 상대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는 한편 대한조선·대한중공업·대한시멘트 등 전 계열사로 적용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허 회장은 "지금까지 자체 성장에 치중한 나머지 협력업체의 입장을 헤아리고 반영하려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협력업체가 발전의 동반자라는 인식의 전환 아래 피

부에 외치는 공생방안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대주그룹은 지역사회 기여방안의 1단계안도 함께 발표했다. 여기에는 계열사 직원모집시 지역민 채용비율 확대, 지역대학과의 협력 및 지원확대, 지역인재 육성프로그램 개발 등이 담겨 있다. 한편 대주그룹은 20일 검찰이 허 회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이 각각된 데 대해 "지역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지금까지의 과오를 바로잡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건설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황주홍(오른쪽 다섯번째) 강진군수와 전우만(네번째) 광주신세계 대표이사 등이 21일 강진군 향토 특산물 전 개막식후 백화점 식품매장에서 전시 품목을 살펴보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강진 특산물 '광주 소비자와의 만남' 25일까지 신세계백화점서 판촉전

'제6회 청자골 강진군 향토 특산물전'이 2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에서 개막됐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특산물전에는 강진 쌀을 비롯해 과채류, 버섯류, 축수산물, 육천토하, 전통된장 등 200여개 품목이 전시, 판매된다. 특히 올해 '소비자가 뽑은 전국

12대 브랜드쌀'에 선정된 '봉황쌀'과 프리미엄 호풍쌀 등 고품질 친환경쌀이 입맛이 까다로운 광주 소비자를 만나게 된다. 전시 품목은 시중가격보다 10~30% 싸게 판매되며 농산물 구매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려청자 재현작품을 증정한다. 또 행사기간 중 백화점 1층 로비

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한국 정상들의 식탁에 올랐던 '청자상감 용봉국화문개합(청자합)' 등 국보급 재현품과 한지공예 작품 등이 전시된다. 광주신세계 강진주 식품팀장은 "특산물을 통해 우수한 상품을 발굴하고 소비자는 산지 직거래로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며 "매출액의 1%는 강진군 인재육성기금으로 기탁하게 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광주·전남 전문건설업체 '경영악화'

최근 광주·전남지역을 비롯한 지방 건설경기 침체와 업체간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지역 내 전문건설업체가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내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전문건설업자의 겸업제한 폐지 등으로 인해 경영난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각 발주 기관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남도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남의 전문건설회원은 총 2천290명에 달한다. 이는 2005년(2천224개)에 비해 3.4%(75개) 늘어난 것으로, 2004년(2천126개)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발주 급감·대금 지연 '이중고' 시공영역·공사대금 확보 등 지자체에 요청

하지만 이들 전문건설업체는 지방 건설경기 위축과 지역 SOC사업 축소 등의 여파로 공사발주물량이 크게 줄어면서 업체별 공사실적이 '악화일로'를 겪고 있다. 지난해 전남 전문건설업체의 기성 실적 총액은 2조3천9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대비 수주액이 5.5%(1천398억원) 급감한 2005년(2조3천912억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매년 업체별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남 업체의 평균 실적은 10억4천만원으로, 2005년보다 2.8%(3천만원) 감소했다. 또 업체당 평균실적을 웃도는 업체는 전체의 21%(493개)에 그쳐 업체별 수익성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다. 반면 지난해 전남에서 경쟁입찰에 부처진 공사발주액은 총 1천250억원으로, 2005년(1천604억원)에 비해 22%(354억원) 급감했다. 또 이들 물량의 건당 발주액도 같은 기간 2억1

천900만원에서 1억7천만원까지 떨어지면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부추기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회는 21일 나주에서 전남도와 농촌공사 전남본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주관서 관계관 초청 간담회'를 갖고 전문공사 시공영역 보호 및 공사대금 확보 방안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도회는 내년부터 일반-건설업자 겸업제한이 폐지되는 만큼 전문업체의 참여가 필요한 전문공사의 경우 반드시 '전문업종'으로 발주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전자입찰수수료 폐지 등을 전문건설업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성인병 치료 효과 가능성 김치개발

식품연구, 생리활성 함량 늘려
한국식품연구원은 21일 생리활성물질인 S-아데노실메싸이오닌(SAM)이 일반 김치보다 3배 정도 많은 기능성 김치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연구원의 이명기 박사팀, 명지

대 서주원 교수팀이 함께 농촌진흥청 '바이오그린 21'사업의 하나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김치맛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SAM 함량이 높은 잣갈뿔과 배 등의 부재료를 적정 비율로 섞어 담근 김치의 SAM 함량은 660 마이크로몰로, 일반 김치(240 마이크로

몰)보다 2.74배 많았다. SAM은 생물에서 발견되는 천연물질로, 간 독성 제거와 우울증, 뇌질환성 성인병·치매·관절염·콜레스테롤 이상 등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박사는 "김치의 김치맛을 유지하면서도 SAM이 많은 부재료를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김치 조리법을 개발한 것"이라며 "김치의 SAM 함량을 더 늘리는 조리법을 연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광양제철소 '냉연 증강사업' 마무리

광양제철소가 20일 고부까지 제철생산과 판매확대에 부합하기 위해 지난 한달간 진행된 4 냉연공장의 냉각 압연라인(No.4 PCM) 증강사업을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 능력증강사업으로 생산능력이 기존 대비 5% 이상 증가함에 따라 자동차용 강판생산을 위한 중간소재인 FH(폴하드)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능력 증강사업이 진행된 한달여간

4 냉연공장은 개보수가 진행중인 부분을 제외한 연속소둔라인(CAL)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며 자동차용 냉연코일 생산에 박차를 가해왔다. 97년 8월 준공해 단일공장으로 세계 최대의 규모를 갖춘 4 냉연공장은 이번 사업완료로 광양제철소가 650만톤의 자동차강판 생산체제를 조기에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종태기자 jitlee@kwangju.co.kr

공공기관 제조물품 입찰 자격심사 강화

앞으로는 공공기관 제조물품 입찰을 위한 등록단계에서 업체에 대한 자격심사가 강화된다.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21일 조달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일부 부실 등록자로 인한 입찰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제조물품의 경우 3년마다 갱신등록을 의무화하고 특히 공당등록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소기업은 제조물품을 등록할 때 공장을 실사해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종태기자 jitlee@

광주 남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되나

정부 실사... 추가 해제 여부 검토
광주 남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연기군, 부산 해운대구·수영구, 울산 전지역, 경남 창원 등이다. 정부의 이번 실사는 미분양물량 급증 등으로 인해 중견건설사들이 잇따라 도산하는 등 지방의 주택경

기가 극도로 악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9월 말 현재 8만9천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의 중견건설업체들이 자금난을 이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이처럼 지방의 주택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정부가 전면 실사를 벌이는데 따라 지방의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추가 해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방 투기과열지구의 전면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법에 따라 실사를 했을 뿐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향후 정부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